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인쇄일 2005년 10월

발행일 2005년 10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2521, 팩스: 02)901-2541

인쇄처 두일디자인 전화: 02)2285-093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1	I.	서론
3	II.	북핵폐기
6	III.	대북 에너지 지원
9	IV.	북·미관계 개선
12	V.	북·일관계 개선
17	VI.	남북관계와 정상회담
20	VII.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23	VIII.	우리의 정책방향

I. 서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이 지난 9월 19일 북핵 포기 등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되었다. 그동안 미국의 '선택폐기' 주장과 북한의 '핵의 평화적 이용권 보장'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개최된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그러나 6자회담 자체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6개국의 기본입장, 금번 회담에서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의 6자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긴박성,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및 북한의 실리주의적 선택, 한국·중국의 적극적 중재노력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대타협이 도출되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핵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상을 향한 '입구'에 진입했을 뿐이기 때문에 향후 등정과정에서 어떤 난관이 조성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만일 6개국이 예상치 못한 난관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정상탈환은 물론 등정자체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9·19 공동성명'이 제반 난관을 극복하고 탄생되었기 때문에 향후 더 이상의 난관은 없을 것이고, 설사 난관이 조성되더라도 6개국이 힘을 합쳐 이를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전망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반된 전망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은 제4차 6자회담이 낙관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향후 어떤 단계를 거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국내 일간신문인 「내일신문」과 공동으로 시나리오화하였다.

양 기관은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편의상 공동성명 합의이행 구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이행 내용을 <표>로 나타낸 후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정책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다. 전망을 위한 편의상 1단계는 2006년 6월 말까지로 제5차 6자회담 완료, NPT복귀 및 IAEA핵 사찰 시작을, 2단계는 2009년 말까지로서 핵동결과 핵 폐기 시작 등 전·후 단계를, 3단계는 핵폐기 완료 이후 시점으로서 북·미수교, 북·일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상정하였다.

<표> 제4차 6자회담 합의사항의 단계별 이행 구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2006년 6월)	(2006년 7월~2009년 말)	(2010년 이후~)
주요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6자 회담 (2005/11~2006년 상반기) 완료 NPT복귀 및 IAEA핵사찰 협의 6·15정상회담 6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전반기): 핵사찰 협의/핵동결 2단계(후반기/2008년 이후): 핵폐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폐기 완료 북미수교, 북일수교 한반도 평화협정
북핵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6자회담: 미·북간 경수로 제공문제 주 쟁점 NPT복귀 및 IAEA 핵사찰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전): 영변시설 2002년 이전화, 동결지속/IAEA핵사찰 시작 2단계(후): 본격적 북핵폐기 이행/북한 평화적 핵이용 권리 논의/남한의 대규모 경협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폐기 완료 남북한 및 북미간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 협정에 관한 논의
대북에너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유제공 시작(중유5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전): 200만Kw대북송전 협상시작(건설기간 3년 예정) 2단계(후): 대북송전시작/대북경수로지원 논의시작 * 중유지원은 대북송전시작 시 종료되며, 대북송전은 경수로 건설 완료시 종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수로 건설 시작 및 전력공급 시작과 동시에 200만Kw 전력공급 중지
북미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의 경제제재완화 조치 (대통령결정사항) 시작 고위급의 상호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전):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경제지원 시작/테러지원국 해제 2단계(후): 경제제재완화조치 (의회동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격적 북미수교협상 시작 북미평화협정 논의
북일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수교회담 재개 위한 실무접촉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이즈미 방북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격적 회담 진행 일본인처 고향방문 확대 일본의 대북식량 및 비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일관계정상화(북미 관계정상화와 연계)
남북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차 남북장관급 회담개최 예정(2005.12) 장성급 회담개최(2006.초) 2차정상회담개최(2006.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선언 -대북마살플랜(대규모개발 지원)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단계(전): 대북마살플랜(대규모 개발지원)의 초기적 조치 실행/대북송전방안 논의 및 송전망 건설시작/초기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남북상주대표부 설치 2단계(후): 대북송전시작/국회차원 교류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군축논의 가속 장관급회담 및 실무 회담의 상시화 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연합단계논의 시작
평화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중반기: 한반도 평화 선언(2차정상회담결과)/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포럼, 남북군사회담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관련 실질적 논의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II. 북핵폐기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핵심은 역시 제1항의 합의다. 6개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 데 전원일치의 합의를 이루었다. 특히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한국은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반입하거나 배치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한국영토에는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주한미군기지에 핵무기를 반입했거나 배치했을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의구심을 풀어주려는 약속이다. 동시에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준수와 실현”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킴으로써 남북한 차원에서도 북한의 전면적인 핵 폐기를 포함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토대 위에서 지난 1992년에 구성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되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항목이다.

그리고 공동성명은 북한의 전면 핵 폐기를 목표로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번 합의대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포기’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되면 북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고, 따라서 NPT 가입국가의 일반적인 권리인 전력생산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서 평화적인 핵 이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합의 사항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의심받고 있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국제사회와 6자회담의 나머지 참여국이 수용하는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 하는 것이다. 나머지 나라들도 물론 공동성명의 합의대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전면 핵 폐기를 향한 조치의 진행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향후 이번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협상과정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외무성대변인이 공동성명 다음날 주장한 경수로 제공문제이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조속한 경수로 제공이 북한의 “평화적 핵 활동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단계적인 해체와 그에 대한 사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고 협상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5차 6자회담에서는 경수로문제를 들고 나올 북한과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할 미국 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협상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나 미국 모두 국내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협상을 무조건 장기화하거나 파국으로 몰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망 회복이 중요하다.

결국 많은 우여곡절은 있을 것이지만 공동성명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대전제로부터 쉽게 이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단계적 핵 폐기 과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2005년 11월 중 5차 6자회담이 열리면 그 협상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지난 4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06년 상반기에 4차 6자회담 공동성명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1단계 과정이 시작될 것이다.

제1단계, 즉 북한의 전면 핵 폐기를 향한 출발은 지난 2002년 10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하고 IAEA와의 안전협정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영변의 핵시설들은 다시 동결 상태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북한이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개봉하여 재처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이후의 상태에 대한 북한 측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임시사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련의 임시사찰을 통해 북한의 신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검증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영변 핵시설은 일반사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지난 1994년 10월의 제네바합의에서 ‘허점’(loophole)으로 지적된 바 있는 제네바합의 이전의 과거 핵 활동은 여전히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 있을 공산이 크다.

제1단계에서 북한 핵의 동결, 사찰 및 검증의 기술적인 절차들은 북한과 IAEA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가칭 ‘사찰 및 검증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사찰·검증 레짐을 만드는 방법이 협의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지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IAEA의 사찰 및 검증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IAEA의 사찰 및 검증 체계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실효성이 있는 사찰·검증 레짐을 구성하는 방안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와 실현’을 이유로 북한이 남한 내의 미군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북한 내의 다른 핵 시설 및 기지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전면적인 이행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제1단계에서는 북한 핵의 폐기를 향한 과정을 출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이 문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1단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는 두 개의 세부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단계의 전반기에는 1단계에서 시작한 영변 핵시설이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2002년 10월 이후 북한의 핵 활동이 명확하게 규명되며, 북한의 NPT체제 복귀와 IAEA와의 핵안전협정이 이행되면서 북한의 핵 활동은 전면적인 동결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동결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IAEA에 대한 보고가 빠짐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IAEA의 사찰과 검증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유지되면서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의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에 따라서 본격적인 북한 핵 폐기의 절차가 이행되는 제2단계의 후반기가 시작된다.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IAEA가 북핵폐기의 과정을 감시·사찰·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거나 그와 병행하여 또는 별도 기구가 그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폐기의 과정을 가급적 단축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지만, 북한 핵의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목표로 한다면 철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북한에는 영변에 있는 5MWe 실험용 원자로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 저장시설 이외에도 태천, 박천 등의 지역에 모두 16개의 핵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아직 보고되지 않거나 의심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은 적어도 3년 남짓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단계 전반기에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북한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계속 유보되었을 경우, 북한은 2단계 후반기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약속을 받으려할 것이다. 북한 핵 폐기가 6자회

담 참여국의 합의대로 한반도비핵화를 향해 진척된다면 북한의 신뢰가 어느 정도 쌓여질 것이고, 2단계 후반기에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폐기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는 남북관계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건설과 같은 대규모 경협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 안보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남북한 사이에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거나 새로운 형식의 남북 간 핵통제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남북 간의 기술적 수준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안보 차원의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반도비핵화를 통제하는 항구적인 국제사찰·검증레짐의 구성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북한 핵 폐기를 감시·사찰·검증하는 기구의 설립을 통해 IAEA와 동시 병행적으로 가동되면서 협력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기구는 북한의 핵 폐기가 완료되면 해체될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북한 핵의 전면 폐기 시점까지 존재한다면,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IAEA가 참여하는 4자 통제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핵 폐기가 완전히 이행·완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남·북한 및 북·미간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협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NPT의 회원국으로서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전면 핵 폐기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게 되면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 제기나 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의 분야에서 평화적 핵 이용의 권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Ⅲ. 대북 에너지 지원

북한이 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였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또는 원자력을 통한 환자치료 및 생물학적 활용 등이

당시의 기본관심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956년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시작하자 핵폭탄 보유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초, 당시 사회주의 형제국이었던 구소련과 중국간 갈등이 시작되고, 군사적 지원자였던 구소련이 쿠바미사일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북한은 자체 핵개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희망이 결국 제1, 2차 핵위기를 초래하였고, 한반도의 불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에 대한 관심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미국핵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보유라는 2가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 모두를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핵폐기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북 전력지원도 실포 경수로 포기 및 북핵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그 순서는 대북 중유 제공→200만Kw 전력제공→경수로 제공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다비용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에너지 지원 비용은 핵문제라는 핵심과제 해결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이 얼마나 성실히 핵폐기 절차를 밟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수로 지원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동결 후 IAEA 핵사찰을 받기 시작한다면 중유제공이 시작될 것이다. 적절한 중유의 양은 중유 50만톤 정도가 될 것이다. 중유지원 주체는 당연히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일 것이다. 소위 '5개국협의회'는 50만톤 지원에 대한 각국간 분량을 할당하고 인도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일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만Kw 대북 송전을 위한 남북간 협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 송전 시설은 건설기간이 최소한 3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대북 송전을 위해서는 송전시설이 건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송전선 통과지역, 송전탑 건설, 구체적인 송전지역 등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5개국간 송전안전공급협약이 맺어져야 할 것이다. 남한의 일방적 대북 송전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북핵폐기’에 대한 해석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대북 전력지원을 약속했었고, 북핵폐기 시부터 대북 전력공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일 6자회담 시 ‘동결 대 보상’이 합의된다면 대북 송전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북 전력지원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북 송전은 북한의 핵동결 또는 폐기가 확실한 경우에 시작될 것이다. 제2단계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핵동결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2008년부터는 대북 송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북 송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단독이 아닌 5개국 전체의 관할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대북 경유지원은 당연히 중지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할 것이다. 만일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된다면 핵의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경수로 지원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경수로 지원문제와 신포경수로 활용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이 신포경수로 건설로 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신포경수로 재활용으로 난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의 산물인 신포경수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성실히 핵폐기 절차를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미국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원천봉쇄에 있기 때문이다. 신포경수로는 ‘북경합의’에 의한 경수로로 재명명되면 그만이다. 신포지역은 지진에 대한 안정성 차원에서나 그 동안 지출된 비용적 측면에서나 재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최악의 경우, 경수로 지원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때에는 화력 발전소나 수력발전소로의 대체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대북 경제지원 즉, 대규모 인프라 구축 차원의 대북지원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가 완료되는 시점인 제3단계에서 경수로 건설도 종료되어 전력공급이 시작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터키베이스로 이루어 질 것이고, 5개국 책임하에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후 북한의 신뢰만 확보된다면 더욱 많은 경수호가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경수로를 통한 전력공급 시작시 대북 200만Kw 전력공급은 자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북한이 원할 경우 전력을 유료화하거나 또는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위 평화비용 부담차원에서 저렴한 가격과 장기저리 차관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북·미관계 개선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핵동결 수순에 들어가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로 경제제재완화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네바합의 당시 북미 양측은 ‘합의 후 3개월 내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담한 방식’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핵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 해제, 대폭적인 경제지원,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관계정상화 등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조치를 부분적으로 몇차례 완화한 적이 있다. 1988년 남한의 「7·7선언」에 호응하여 미국인과 북한인 간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다. 예컨대, 미외교관의 북한인사접촉,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 및 문화행사에 북한 인사의 참석, 미국시민의 친지방문 및 학술·문화행사를 위한 방북, 식량·의약품·의료기재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수출을 허용하였다. 1994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미국은 통신·정보, 재정거래, 무역거래 등과 관련한 대북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였다. 북·미간 국제통화, 국제전화 회로 연결에 필요한 장비의 대북 수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수입 등이 포함되었다.

미국과 베트남관계를 예를 들면, 베트남의 태도와 양국간 관계진전에 따라 단계별로 경제제제의 완화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1단계로 베트남의 캄보디아 평화협정 조인에 따라, 뉴욕주재 베트남 외교관의 25마일 여행제한이 철폐되고, 미국 단체여행단의 베트남방문을 허용하였다. 2단계로 평화유지군의 캄보디아 주둔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간 통신망 연결, 미국 기업과 베트남간의 상거래 허용,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베트남의 체불금 지불 지원, 미국 기업의 베트남 내 사무소 설치 허가, 미정부 차원의 대베트남 협력계획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었다. 3단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의 완전철수와 유엔활동의 정착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간 연락사무소 설치, 무역금수 조치의 전면 해제, 기본적 생필품에 대한 국제금융기관들의 대베트남 지원이 이루어졌다.

북미간에도 핵동결 조치가 준수되고 경제제재완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락사무소는 북미간 관계정상화로 가는 첫

관문임을 감안할 때, 북한측이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부시행정부도 북핵 해결의 외교적 업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년 중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을 통해 핵폐기 이행방안과 관계정상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북미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전후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워싱턴을 방북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고위급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진 후 북미간 연락사무소는 평양과 워싱턴에 개설될 것이다.

그러나 북미연락사무소 개설에는 몇가지 암초가 놓여 있다. 우선 북한이 NPT 복귀를 지연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허리케인 피해와 대처 미흡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 악화일로로 이라크, 이란의 핵개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19 합의로 간신히 봉합된 북핵 문제가 다시 흔들린다면, 부시 행정부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약점을 이용하여 핵폐기 이행에 들어가기 전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1994년도의 예에서 보듯이 북한이 연락사무소의 개설 자체를 연기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뉴욕 유엔대표부를 통해서 대미접촉과 정보수집 등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워싱턴 연락사무소가 추가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계정상화로 가는 절차로 연락사무소가 필요한 것인데, 미국과의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연락사무소만 설치하고 관계정상화를 미룰 것이라고 판단하면 북한이 연락사무소 개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설치할 경우 광범위한 정보수집만 허용하게 된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또한 워싱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외교관 통제 문제, 예산문제 등 부작용도 염려된다.

셋째, 관계정상화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은 미국이 처음부터 관계정상화의 초기 조치인 연락사무소라는 카드를 미리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북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를 미루고 있는 일본의 예에서도 보듯이 연락사무소를 가급적 지연시키며 북한을 압박하려고 할 수 있다.

2단계의 전반기인 핵동결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와 함께,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북 경제지원은 양자적 경제지원과 다자적 경제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자적 관계를 보면, 미국의 대외경제지원을 관장하는 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의회의 간섭없이 어린이 생존, AIDS 치료 및 통제관련 연구, 대외재난구호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

으며, 농업무역 발전 및 지원령(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 PL 480)은 식량난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행정부가 농산물을 원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위내에서 미국 행정부가 조건없이 대북지원을 단행할 수도 있다.

또한 북미간 신뢰회복의 상징적 조치로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에는 일본 적군파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걸려 있으나, 1999년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근접하였던 경험을 보면, 이는 의외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전격적으로 해제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의회의 결의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기간을 임의로 설정함으로써 카드화할 여지는 있다.

제2단계의 후반기인 핵폐기단계에서는 행정부 차원에서 부시 대통령의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경제제재완화조치를 넘어서,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제재완화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즉, 보다 실질적인 대북경제지원을 위해서는 의회가 몇 가지 규제조치를 추가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외지원령(Foreign Assistant Act)은 공산주의 국가와 테러지원국에 대한 지원을 규제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두 가지에 다 포함된다. 또한 대외관계권한령(Foreign Relations Authoirzation Act)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조항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하여 경제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지원이 필수적이거나, 미국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규제하는 목적의 국내법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대외활동예산의 편성에서 북한을 미국의 간접원조 금지대상 국가로 지정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핵폐기가 완료되면, 북미는 본격적인 수교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미·베트남의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는 캄보디아 총선거와 미군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의 해결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은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베트남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기본적인 생필품 분야 이외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북미평화협정이며, 이를 위해 북·미관계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을 만드는 것도, 경수로를 요구하는 것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의 경우는 수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나라였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 초기 포괄접근 제안시 나왔던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인도적 문제 등이 한꺼번에 제시되면서 수교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주장하는 미국적 가치로 봤을 때도 인권·민주화 등 문제가 많은 국가인 북한과 수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는 북핵폐기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의 성격의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V. 북·일관계 개선

북·일관계 개선과 국교정상화로의 진전은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 현재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제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느냐, 둘째, 관계개선과 수교를 위한 양국의 국내적 조건이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셋째, 국제적 조건으로서 관계개선과 수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관련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냐이다.

북·일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일본에게 그 자체로도 최대의 안보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에의 협력을 추구하는 일본에게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90년대 초에 진행된 양국간 수교회담이 결렬된 표면적 이유는 '이은혜 문제'였으나 사실상의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였고, 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결과 열린 10월말의 제12차 수교교섭이 성과없이 끝난 것도 10월초 미국 특사 방북시 북한이 시인했다는 핵개발계획 보유가 결정적 이유였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일본은 북한에게 핵개발의 중단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간 현안으로 인식, 일본과 핵개발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제5차, 제6차 6자회담으로 해결의 틀이 보다 분명해지고 여러 합의사항에 관한 이행구도가 완비되는 제1단계에서 북·일 양국간 수교회담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제4차 6자회담에서 양국은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에 합의했기 때문에 수교회담의 재개는 2006년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진전의 속도는 핵문제 해결책의 명확한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우 느릴 것이다.

2006년 상반기에 수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이 진행되거나 수교회담이 재개될 경우 양국은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에 골몰하게 될 것이다. 2004년 5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가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납치를 인정한 피랍의혹자 10명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후 북한이 전달한 피랍자의 유골에 대한 진위 논란과 일본의 유골 반환 거부로 피랍 일본인 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없게 되었다.

최근 송일호 북한 외무성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양국관계를 교착상태로 빠뜨린 유골 진위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유골 반환을 강력히 요청했던 것에서 물러나 "유골을 반환할 수 없다면 현재 보관상태나 감정조사의 진상에 대해 명백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유골을 반환받지 않고서라도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피랍 사망자의 정확한 사인규명 등을 위해 정부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납치피해 전반에 대한 보상을 북한에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양국간 실무급에서의 논의가 피랍 일본인 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거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06년 9월 전에 세 번째로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 송일호는 고이즈미 총리가 세 번째 방북을 하겠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만간 열릴 예정인 국교정상화를 위한 양국 실무협상에 대해 "평양선언 이행에 도움이 되는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면 제기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라며 일본이 요구하는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 등의 의제를 배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제2단계인 2006년 하반기부터는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의 진척 여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 틀이 갖추어졌으므로 양국간에 합의된 의제에서 얼마나 의견접근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안보 위협의 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구상의 유일한 미수교국이다. 따라서 일본의 정치가라면 누구나 대북수교에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다. 북한도 대일수교를 통해 경제적 지원의 확보와 외교적 고립에서의 탈피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90년대초 이래 조기 대일수교를 희망해 왔다. 비록 상대방에 대한 양국민의 감정이 좋지는 않지만, 국민적 감정은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에 비해 추상적이고 가변성이 커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양국간 관계개선과 수교를 위한 국내적 조건은 충분히 구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북·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는 국교정상화를 위한 기본문제,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경제적 제문제, 국교정상화와 관련한 국제문제, 기타 쌍방이 관심을 갖는 제문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기본 방향은 이미 2002년 9월의 ‘평양선언’에서 합의되었다. 그러므로 2단계에서는 양국이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놓고 합의를 모색할 것이다.

의제 가운데 기본적인 문제는 일제 지배의 역사에 대한 인식에 합의하느냐이다. 북한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으므로 거기에 대해 사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식민지배가 정당한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합법하다는 것이다. 이 시각차는 사죄의 수준 및 보상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조정되기 쉽지 않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상수준도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일본으로부터 철저한 반성과 사죄의 표명을 얻어내고 싶겠지만, 사실 사죄의 수준 문제는 실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상문제에서 ‘평양선언’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모두 재산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고 명시했고 “국교정상화 이후 쌍방이 합의한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제공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인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교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즉 한일회담 때처럼 보상방식에서 북한도 청구권방식이 아니라 경제협력 방식에 동의하는 한편, 보상금의 수령은 국교정상화 이후에하기로 했으나 규모와 내용은 국교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수교회담에서 양국간 논란의 핵심은 아마도 보상금 규모가 될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도 일본이 제공하는 자금액수 문제가 가장 난항을 겪었는데 북·일 수교교섭에서는 대체로 100억 달러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경제협력 방식이라 하더라도 일본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상금의 용도에 여러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큰데, 예를 들면 보상금 사업에 일본기업의 참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북 경제침투를 노릴 수도 있다. 2009년경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양국은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북·일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교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인처 고향방문이 연내 100여명 수준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일본이 50만톤 정도의 식량을 북한에게 몇 차례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비료, 농약, 농자재 등 북한의 식량증산을 위한 품목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북·일간 현안 가운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문제나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모든 문제는 양국의 쌍무회담보다는 6자회담이나 그 합의에 따른 다른 다자 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일 국교 정상화는 2010년 이후 3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북정책은 ‘21세기의 정치대국화’ 노선과 이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라는 틀 내에서 추구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북한은 대일관계 개선이 대미관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90년대초의 수교교섭이 결렬된 것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 1995년에 수교회담 재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북한은 “양국간의 회담이 철저히 자주적이고 또한 독자적인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조항의 삽입을 고집, 관철했다. 2001년 북한 잡지 「천리마」도 북·일 수교회담을 평가하면서 일본이 북·미관계 진전속도에 따라 수교회담을 조절해 왔다고 비난하면서 일본이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함으로써 북·일 수교회담은 “조선을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 융합체를 다른 편으로 한 역사상 유별스런 회담”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5월의 제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조일관계 개선의 진전여부는 일본의 동맹국이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개입을 우려했다.

따라서 일본이 북·미관계의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 앞서서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미·일동맹체제가 유지되는 한, 일본의 한반도정책은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로서는 1970년대 초에 있었던 ‘닉슨 쇼크’를 망각할 수 없다. 즉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사실을 통보받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관계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예컨대, 북·미 상호간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곧이어 그와 유사한 조치가 북·일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북관계를 조율할 것이다. 결국 북·일관계의 진전과 정체는 그것이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노력이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의 핵이 폐기되면 북·미관계도 정상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북·일관계도 정상화될 것이다.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의 대북 보상금 지급과 경제협력은 “국교정상화 이후 쌍방이 합의한 적절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보상금 지불과 관련한 문제들이 양국간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일본이 지불할 보상금은 북한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나 보상금의 활용이 북한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수교회담 초기에 일본에게 전쟁배상을 계속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쟁배상은 전승국이 패전국에게 배상금액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배상금을 지불하는 패전국이 전승국의 배상금 사용 용도에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이 일본에게 전쟁배상을 요구한 것은 배상금 규모와 그 사용 용도에 대한 일본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한 때문인 듯하다.

북한의 전쟁배상 요구에 대해 일본은 국제법상 일본이 조선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배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욱이 2차대전의 전승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해, 일반적인 전쟁배상과는 달리 일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되었으며 그 배상금도 피배상국과 일본간의 합의에 따라 대부분 현금이 아닌 현물과 인적 지원 형태로 지불되었다.

이미 북한이 ‘경제협력방식’을 수용하였지만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방식의 보상을 받든간에 그것의 대부분은 현금이 아닌 현물과 인적 지원의 형태를 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상금의 용도도 북한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일본과의 합의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상금이 지불되는 분야나 방법은 향후 교섭에 달려있으나 북한의 식량증산, 에너지난 해소 및 낙후된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스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 현금에 의한 지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보상협정에 보상이 일반무역을 저해한다든가 보상으로 공여된 물자가 제3국에 재수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삽입 여부도 논의될 것이다. 지불기간을 단기간으로 하느냐, 장기에 걸쳐 매년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하느냐도 난항을 겪을 것이고 매년 지불되는 액수의 상당부분을, 예컨대 일본산 자본재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의 포함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다.

VI. 남북관계와 정상회담

4차 6자회담의 결과는 남북관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장관급 회담과 개성공단 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전되어온 남북관계는, 북핵위기라는 외교안보차원의 외적 압박변수가 긍정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합의된 사항들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 전력 200만kw 지원과 경수로건설, 그리고 대규모 대북 지원 등 남한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활성화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남북대화차원에서 2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1단계 시기의 경우, 6자회담의 가시적 성과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년 12월로 예정된 17차 남북장관급 회담과 16차 장관급회담에서 잠정합의한 바 있는 장성급회담의 개최가 2006년 초반 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 등은 가시적 성과의 도출과 아울러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핵위기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입지는 상당부분 제약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국내정치적 상황 역시 정상회담의 개최에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남한의 경우 보혁구조 속에서 여론의 확고한 지지가 없는 정상회담의 개최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경우도 답방형식의 정상회담 개최는 사실상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은 서울답방이 아닌 '정상회담의 재개'에 의미를 둔 북한지역에서의 개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의 시기는 2006년 중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6·15 혹은 8·15를 전후한 상징적 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의 경우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주게 될 후속 6자회담이 5차와 6차의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2006년 상반기를 거쳐야 실무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 내부적으로도 2006년 5·31지방선거가 있어 상반기 개최는 국내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이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대형사안이 국내정치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4·13총선 3일전 발표된 '6·15 정상회담 개최'는 여당에 역풍으로 작용하였고, 선거에서 야당은 승리했다. 따라서 여권이 2006년 지방선거

이전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같은 이유로 대선이 있는 2007년도의 경우도 정상회담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차원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참여정부 입장에서 후반기에 접어든 2006년 중반의 경우, 2차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획기적인 대북정책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정상회담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간의 대북접근방식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라는 개념 안에서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균형자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질서변화과정과 연계하여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제네바합의 등 대외적 환경을 고정변수로 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외적 환경이라는 틀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차원에서는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제2의 6·15가 아닌 새로운 질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함과 아울러 1차 정상회담의 차원을 능가하는 의제가 필요하며, 이는 ‘평화’와 ‘교류’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차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평화문제의 가시적 진전이며,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과 같은 상징성 있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선언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포럼과 남북 당사자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진행에 대해 기본적 틀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정상회담은 향후 구성될 동북아 다자간 평화포럼의 ‘입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정상만의 협의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우나, 한반도 문제당사자로서 평화선언을 통해 평화체제전환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후속 신뢰구축조치에 합의할 경우, 매우 큰 상징적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동시에 대북 지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북마샬플랜’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의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통일까지 내다본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 지원 및 계획을 의미하며, 따라서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인프라차원의 지원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

담의 합의와 아울러 이미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에서 개발지원으로의 성격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대북마셜플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정상회담은 대규모 개발지원이라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시점에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5차, 6차 6자회담에서 가시적 도출이 나오게 될 경우 남한 주도의 대규모 북한 개발지원의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상회담을 통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2006년 중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2단계가 시작되는 2006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북마셜플랜의 초기적 조치들의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 노하우 등 북한경제의 재건에 필요한 중요 요소들이 대량으로 북한에 제공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대북전력지원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며, 송전망 건설은 2단계 시기 상반기중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대북송전은 2단계 시기의 하반기인 200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교류는 ‘금강산사업’이나 ‘개성사업’의 규모를 넘지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마셜플랜에 부응하는 인적교류와 북한내부의 영향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적교류의 급속한 확대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마셜플랜형 대북개발지원이 실행될 경우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의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적교류의 급속한 증가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남북한간의 기능주의적 통합은 보다 심도있게 진전될 것이다.

2단계 시기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시적 후속조치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남북한간에 구체적인 차원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예상되는 다자간 평화포럼의 진행과 아울러 남북한간에 북핵의 완전폐기 이전이라도 남북간에 부대이동과 군사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등 초보적 신뢰구축조치와 운용적 차원의 군비통제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단계 시기, 상반기 중에는 남북상주대표부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촉진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경이 되면 남북한 정당간 교류 등 국회차원의 남북교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국회차원에서의 남북 통일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2단계 시기에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기존의 형태와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교류분야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거나 인적교류의 급속한 증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은 민족공조의 의미를 강조하고 남북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관대첩비 반환이나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등과 같은 형태의 민족성이 드러나는 상징적 남북 협력사업에 지속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에 해당하는 2010년 이후의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바, 남북한간의 군축이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대북마셜플랜의 집행과 대북 송전으로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는 구조화되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 것이며, 민족문제의 보혁간 갈등 구조의 완화가 예상되며, 남북한간의 인적교류의 일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회담 및 실무회담의 상시화와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연합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향후 남북관계개선은 6자회담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것인 바, 후속 6자회담에서 실무적 합의가 지연되거나 진통이 지속될 경우 남북관계 진전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핵폐기'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독립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북개발지원 등은 북핵문제의 해소를 전제로 하는 바, 북핵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의 없이 남한 단독으로 대규모 대북지원이 수반되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혁구도가 상존하는 남한내의 국내정치적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없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마셜플랜형 대북개발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미 남북관계 전개가 상당부분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대북개발지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전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VII.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핵 사찰·폐기과정,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는 3개의 회담 틀에 의해서 논의될 것이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대화와 관련되어 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한

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여건 조성과 남북한 군비통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둘째, 6자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평화협정의 방식, 내용, 평화체제 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다. 셋째,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전반적 전개과정을 전망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도 3단계에 걸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복잡한 성격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북핵문제의 해결 및 북·미관계정상화 과정과 기계적으로 조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폐기 과정이 구체적 사항들을 기준으로 전개되는 반면,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 및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3개의 협상들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개의 협상들의 진행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동시이행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제1단계인 2006년 상반기 북한의 NPT 가입 및 IAEA 복귀가 이루어지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2006년 중반기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한반도 평화선언」이 발표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미 강조, 추진 방식, 남북한 군비통제 등을 포함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선언」은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2006년 중반, 「한반도 평화포럼」이 구성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포럼」 방식으로는 미국과 남북한의 3자회담과 중국까지 포함하는 4자회담이 검토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일차적 당사자가 남북한이며, 미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포럼」은 4자회담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4자회담은 이미 운영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개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특히 4자회담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냉전시대에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후, 1차 북핵위기 때와 4자회담에서 제외되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포럼에 러시아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여할 경우, 회담 구조가 복잡해지고 일본도 참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4자회담 형태로 한반도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북한의 핵사찰 및 핵폐기 이행에 상응하여, 한반도 평화포럼과 남북 군사회담을 병행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실질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포럼의 구체적 구성·운영방안이 핵심 사안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우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일반적 사항과 정전협정 준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평화체제 수립시까지 정전협정 준수, 상호체제 인정, 비방·중상금지, 파괴·전복행위 중단 등이 논의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평화협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것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문제, 정전협정의 대체, 평화체제 구축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의 체결방식, 평화체제의 보장문제, 평화체제의 관리방안 등도 검토될 것이다.

특히 평화체제 전환방식과 국제적 보장방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것이다. 우선 4자회담의 틀내에서 남북한의 양자협상을 추진하여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보장을 받는 방안이 있다. 또한 4자회담의 틀내에서 남북평화협정과 북수의 보장협정을 단일 문건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이것은 남북평화협정, 북·미평화합의문, 미·중평화합의문, 한·중평화합의문 등 4개의 개별적 양자간 평화합의문을 단일 문건의 형태로 만들어 일괄처리하는 것이다.

한편, 남북한 차원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가 추진될 것이다. 과거 4자회담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원회」와 「긴장완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군사회담이 운영됨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문제는 남북군사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실무적 차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능적 차원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대북 전력지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어업·농업·광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군당국자간 핫라인 설치,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참관, 정보교환, 군

사후련 통보 등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전방배치 병력의 후방 이동, 배치제한 지역 설정 등 군비통제가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북한의 요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북한의 주권 및 내정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의 보장, 북·미관계 개선과정에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명시하는 내용의 북·미공동합의문 채택, 북·미수교를 전후하여 채택될 북·미우호조약의 내용 중에 북한체제보장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있다.

3단계에서는 북핵폐기가 완료되고 북·미관계 정상화 및 북·일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국제적 보장방안, 평화체제 관리방안 등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4자 회담과 별도로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한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한 군축이 본격화될 것이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한·미동맹의 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대북억지력을 위주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포괄적 안보협력을 지향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정전협정이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유엔사의 해체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작전협조체제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VIII. 우리의 정책방향

제4차 6자회담의 성과는 미국과의 공조를 전제로 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외교노력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핵문제의 국제성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동북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교훈을 얻었다. 사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한국만큼 노심초사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만일 한반도 평화가 깨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가 한국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은 최선을 다해 6자회담 성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이의 결실이 '9·19 공동성명'으로 나타났다.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조성될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북핵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간의 눈높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여타 당사자들의 입장도 각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순항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할 것이고, 그 역할은 당연히 한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6자회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한미공조문제와 이와 관련한 국내적 갈등이 주요한 장애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6자회담에 대한 한국의 중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6자회담 자체의 전도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하에서 6자회담을 중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공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미국내 다양한 압력집단의 지지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미국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미국 의회, 언론, 전문가, 종교, NGO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 부시 행정부의 이론적 및 정신적 모태인 네오콘이나 종교지도자들과의 연계를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대미외교가 필요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내 주요 역할자로서는 미국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물론 교민 특히 2-3세 교포들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관련당사국과의 긴밀한 협조이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고 있는 관련당사국들도 막상 자신들의 국가이익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다면 한국의 입장을 외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국의 입장만 내세운다든가, 한국의 외교적 성공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여타 행위자들의 공로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해 감사하는 표시를 자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장차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국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탈탈냉전시대'의 쟁점인 테러방지 및 북핵폐기에 6개국이 한목소리를 낼지 모르지만 북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의 패권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갈등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자회담이 잘 진행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남북화해협력 확대이다. 현재까지 한반도 불안정의 제1요인인 핵문제를 야기한 당사자가 북한인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향후 태도가 6자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을 어떠한 형태로든 다자간 협조를 내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사활적인 요소이다. 북한이 6자회담들에 진입한 이유는 안보와 경제문제 때문이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보문제에 대한 일정한 담보를 받아낸 상태이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북한은 아직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북간, 일·북간 수교협상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대북 경제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군가가 제공해 주지 않으면 북한은 '선 경수로 지원' 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6자회담을 흔들려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남한이 평화비용 지불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미 대북 200만Kw 전력지원을 약속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군가는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한내 통합이다. 어쩌면 대외정책 성공을 위해 이것만큼 중요한 요소도 없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내에서는 끊임없는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대립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국내외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국가적·민족적 역량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와 같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사안을 두고 발생하는 국론분열은 전략의 효율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정부·정당·사회단체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만이라도 타협과 관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당연하지만 정부는 국민통합에 필요한 대장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국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은 전술한 바와 같이 향후 최소 5년, 최대 10여년이 경과해야 가시화가 가능할 정도로 장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통합을 유지한 가운데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 6자회담의 성공적 결말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공저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공저
2005-04	광복 60주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핵문제	김근식 저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저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공저

